

가산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도마위 금융당국 “금융사 수준 규제 필요”

정무위 현안질의

거래소 간 안전시스템 차이 지적
자율규제로 인한 제도적 한계 성토
이재원 빗썸 대표 “진심으로 사과”

약 62조원 어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빗썸의 이재원 대표 등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려나와 내부 통제 부족 등을 이유로 물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현안질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약 1970억 원)를 294명에게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첨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 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실제 지갑 보유량하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장부상 합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5분마다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빗썸은 없었던 것 같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거래 규모가 크면 규모에 맞춰 여러 디중복 결재 시스템이 있다. 오지급 과정에서 결재 시스템 같은 것들로 걸리지 않았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무리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당국이 왜 사전 점검하지 못했나”라고 당국에 지적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 시스템이 정비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시스템들이 연동돼야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 부분은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디중복이고 복수의 통제장치가 금융사들은 잘 마련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고를 일으킨 데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표는 “당사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신뢰하는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하리 숙여 사과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부동산 시장, ‘소형 쏠림’ 뚜렷

서울 청약자 60% 소형 면적 선택
높은 분양가·자금조달 부담 등 영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평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가격이 부담되는 수준인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소형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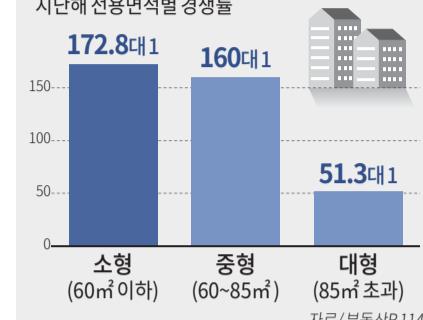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청약자가 21만8047명으로 중형(전용면적 60~85㎡) 청약자 21만7322명을 앞질렀다. 청

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 중 60%인 17만7840명이 소형 면적을 선택해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결과적으로 수요는 청약 당첨 이후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

지난해 전용면적별 경쟁률



형 면적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설계 기술이 개선된 것도 소형 선호를 부추겼다. 관계자는 “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 진화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지면서 작년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인기 쏠림을 넘어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의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百그룹, 현대홈쇼핑 완전 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구조 해소… 기업가치 제고

현대백화점그룹이 고강도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기존에 보유한 현대홈쇼핑 지분 57.36%와 현대홈쇼핑 자사주(6.6%)를 제외한 잔여 주식 전량을 취득하게 된다. 주식 교환 비율은 현대홈쇼핑 1주당 현대지에프홀딩스 6.357104주다. 이를 위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신주를 발행해 현대홈쇼핑 주주들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

고,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기존에 보유한 현대홈쇼핑 지분 57.36%와 현대홈쇼핑 자사주(6.6%)를 제외한 잔여 주식 전량을 취득하게 된다. 주식 교환 비율은 현대홈쇼핑 1주당 현대지에프홀딩스 6.357104주다. 이를 위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신주를 발행해 현대홈쇼핑 주주들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며, 이후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2026 울진대게와 농어의 축제

2026. 2. 27. ~ 3. 2. 월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일원

우리 대게, 진짜 대게, 울진 대게